

서울 G20 정상회의 선언문 첨부 문서(비공식 번역 · 요약)

G20 회원국 정책 공약

2010. 11. 12

* G20 회원국들이 제출한 정책 공약(Policy Commitments)을 담은 영문 원본에 대해 의장국으로서 국문 번역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영문 원본을 활용하기 바람

독 일 (선진확자국)	
재정정책	
● 신뢰할 만한 출구전략을 따라 재정건전화 ●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유럽 '안정및성장협약(SGP)'에서 정한 상한선 아래로 축소 ● 노동·사회·행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교육·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고용유인 향상을 통해 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 추진	
금융부문정책	
금융안정성 향상 조치: ● 'EU 신용평가기관규제안' 시행 ● 독일주식의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ales) 및 유로지역에서의 독일국채발행 금지 ● 유로지역에서 헤지목적 이외에 국채 CDS(Credit Default Swap) 거래 금지 ● G20 결의안을 바탕으로 제정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금융기관 보상기준 시행	
구조개혁정책	
● 교육, 기능개발, 미래지향적 기술에 대한 투자 ● 노동시장 비효율 감소 ● 에너지부문 경쟁 강화 ● 관료주의 감소 및 규제 개선 ● '유럽 2020' 전략 지지	
대외개발정책	
● 2010년 연방경제협력개발부 예산 256백만 유로 증액 ● 연방경제협력개발부 개혁 ● 세 개의 기술적 협력기관을 새로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기로 결정	
통화·환율정책	
(EU 참조)	
일 본 (선진확자국)	
재정정책	
'재정관리전략'(2010.6월)의 주요 내용: ● 2015년까지 재정적자비율(GDP대비)을 2010년 수준의 절반으로 감축하고 20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 전환 ● 2021년부터 정부채무비율(GDP대비) 안정적으로 감소 ● 'Pay-As-You-GO' 원칙을 포함한 재정관리준칙 도입 ● 지출·수입 개혁 및 국채발행 제한을 포함한 2011-2013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	
금융부문정책	
● 장외파생거래의 안정성·투명성 개선 및 그룹단위(group-wide) 규제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및거래법 개정(2010.5월)	
구조개혁정책	
'신성장전략'(2010.6월)으로 수요 촉진, 공급능력 확충, 규제완화 및 일자리 창출 추구; 7대 중점 전략부문: 1. 녹색혁명 : 환경관련 시장 확대 2. 생명혁신 : 신약 및 신의료기구 상업화 3. 아시아경제 : 경제협력 촉진	

4. 관광·지역산업 활성화 : 포괄적 특구 지정
5.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 연구개발 투자 증가를 위해 규제완화 시행
6. 고용·인적자원 : 탁아시스템 개혁 및 은퇴연령 인상
7. 금융부문 : 증권·금융상품 통합거래소 설립

대외개발정책

-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대외개발원조(ODA) 확대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비 2012년말까지 개발도상국에 150억달러 지원
-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을 위해 2011년부터 5년간 교육 및 의료분야에 각각 35억 및 50억달러 지원
- 개발수요의 효과적 충족을 위해 ODA 제공절차 간소화

통화·환율정책

- 일본은행(중양은행), 포괄적 통화량 확대조치(comprehensive monetary easing) 도입:
 - (1) 무담보익일물콜금리 0~0.1% 범위에서 유지
 - (2) 정책 視界 명확화
 - (3) 자산매입프로그램 시행
- 일본은행, 금융안정 및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
- 정부, 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조치 단행

대한민국 (선진확자국)

재정정책

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 정책:

- 통합재정수지(GDP대비) 흑자 전환 : - 0.2%(2010년) → +2.5%(2014년)
국가채무비율(GDP대비) 감소 : 36.1%(2010년) → 31.8%(2014년)
- 중기재정준칙 도입 :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매년 2~3%p 낮게 유지
- 지출 구조조정 : 2011년 재량지출 10% 감축, 2014년까지 매년 R&D투자 8.7% 증가
- 2010 세법 개정(안) : 향후 5년간 조세수입 약 1.9조원 증가, 신규고용 1인당 법인세 1000만원(30세미만 신규고용시 1500만원) 공제
- 재정효율 개선 : (i)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행, (ii) 조세지출예산 도입, (iii) 장기 재정부담 고려, (iv) 지방재정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금융부문정책

금융안정성 제고 및 건전하고 복원력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개혁조치:

- 금융규제감독체계 개선
 - ‘보상원칙에관한지침’ 시행
 - 2011.1.1일부로 국제회계기준 채택
 - 2012년까지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ies) 설립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권고에 따른 자본규제조치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안 마련
- 금융시장·산업 발전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입법화 추진
 -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재개(2010.6월)를 통해 장기채권시장 조성 촉진

구조개혁정책

-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콘텐츠미디어, 사회서비스 등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규제완화 촉진 및 투자환경 개선
- 4대 중점 분야(입지, 물류, 건설, 외국인투자)에 대한 투자장벽 감소
- 수요 충족 및 경쟁 촉진을 위해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고려
- 저신용층, 저소득 대학생, 고령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대책 강화
- 노동시장 개혁
 - － 공공기관 탄력근무제 시범프로그램을 2011년 모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해 정규직 선호 관행 개혁
 -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원칙적 금지(time-off; 2010년)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2011년) 시행
 - － 취업률 향상 및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국가고용전략2020' 수립
- 녹색성장 촉진
 - － 녹색인증제 및 녹색경제를 향한 5개년 구조전환계획 시행
 - － '녹색성장동력기금' 및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 － (탄소)배출권거래 프레임워크 수립
 - － 2011-2015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 공공부문 구조조정
 - － 민영화(24개 기관), 정부출자회사(131개) 정리, 기관(41개) 통폐합 추진

대외개발정책

- 총국민소득(GNI)대비 ODA 비중 상향 조정 : 0.1%(2009년) → 0.25%(2015년)
-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대상 무관세·무쿼터(DFQF) 특혜품목을 2012년까지 95% 수준으로 확대
- 투자협정·과세협정을 통한 개도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지원

통화·환율정책

-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변동환율제도 유지

호 주 (선진적자국)

재정정책

- 재정정책체계 : 중기적으로 재정흑자(평균) 달성
- 2012-13회계연도에 정부재정 흑자전환 전망 (흑자 전환시까지 연간 실질지출 증가율 2% 유지; 강한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 상향 조정)
- 흑자수준이 최소한 GDP대비 1%에 달할 때까지, 정부의 실질지출 증가율을 평균 2% 이내로 제한
- 2010-11회계연도에 순채무비율(GDP대비) 5.7% 전망

금융부문정책

- 금융시장 정상화에 따라, 정부의 은행자금조달 보증 및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차입 보증 종료
- FSB의 재정시스템 상호점검(peer review) (2011년 예정)
- 자본·유동성에 대해 강화된 국제기준(Basel III) 채택 약속
-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 강화된 보상기준 도입·시행

- 자율적으로 규제되어 오던 시장에 대해 독립적 규제안 마련
- 금융자문(financial advice)의 질 향상을 위한 개혁안 발표
-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혁 발표

구조개혁정책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제 리밸런싱을 목표로 2010 세제개혁 단행
 - 자원세 신설
 - 법인세율 인하(30→29%)
 - 영세업체의 A\$5000 이하 자산에 대해 세금공제
- 국가저축 제고 및 고령화 대처를 위해 2019-20년까지 퇴직연금 의무적립률 인상(9→12%),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추가 적립(concessional contribution) 허용, 퇴직연금적립 상한연령(superannuation guarantee age limit) 연장(70→75세)
- 주요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
 - A\$60억 규모의 '지역 인프라 기금' 신설
 - 향후 6년간 교통 인프라 지출 두 배 확대
 - A\$430억 규모의 국가광역망 신설
- 2010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술 전략 : 70,000개의 새로운 직업 훈련소 제공 및 25,000명의 신규 견습생 지원
- 의료보험시스템의 효율성 및 질 향상을 위한 개혁

대외개발정책

- 2015-16회계연도까지 GNI대비 ODA 비율을 0.5%로 확대; 원조금 두 배 증액(A\$43억→A\$86억); 비구속성 원조
- 다자·지역·양자 협정을 통한 무역원조 강화 및 도하무역협상 완료

통화·환율정책

- 호주중앙은행은 평균 인플레이션율(CPI 기준)을 2-3% 사이에서 유지하는 선에서 중기 물가안정을 달성하도록 통화정책 운용; 경제여건 개선으로 확장적 통화정책기조 점차 정상화

캐 나 다 (선진적자국)

재정정책

- 2010년 연방예산의 세 가지 주요 특징
 1. 새로운 경기부양책
 2. 고용·생산 증대, 혁신 강화 및 기업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집중 투자
 3. 중기 균형재정 달성 계획 : 일시적 경기부양책 종료, 프로그램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 시행, 행정기능 및 간접비용에 대한 종합적 검토

금융부문정책

- 효과적인 위험조정 건전성 규제감독 지속
- 참가 주정부(지역증권감독청)와 함께 캐나다통합증권감독청(Canadian Securities Regulator) 설립 추진
- G20에서 합의된 금융부문개혁을 기한내에 이행

구조개혁정책

● 5대 장기 경제계획 이행 ○ 조세우위 : 캐나다시민 대상 감세, 신규 기업투자 대상 세율 인하 ○ 재정우위 : 현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화 ○ 기업우위 : 규제 및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 감소, 기업투자를 위한 좋은 여건 조성 ○ 지식우위 : 고학력·숙련·유연한 노동력 육성 ○ 인프라우위 : 현대적·세계적 인프라 구축
대외개발정책
● 2010-11회계연도까지 원조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약속 이행 완료 ● G8 Gleneagles 협약(아프리카 원조 두 배 확대) 및 G8 L'Aquila 협약(식량 안보 지원 두 배 확대) 이행 ● 산모·신생아·아동 건강을 위한 G8 Muskoka 이니셔티브에 5년간 28.5억달러 제공 ●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SME Finance Challenge)를 통해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의 민간부문 자금조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원조(2천만 달러)를 포함, 혁신적 개발 자금조달 방안 마련
통화· 환율정책
● 인플레이션 타케팅; 시장기반 변동환율제도
프 랑 스 (선진적자국)
재정정책
● 재정적자(GDP대비) 감축 목표 : 6%(2011년) → 4.6%(2012년) → 3%(2013년) → 2%(2014년) ● 2011-2014 다년도 프로그램 법안(신재정프레임워크) 논의중
금융부문정책
● 부실금융기관 정리 비용으로 납세자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20 보상원칙 및 강화된 자본요건 채택, 은행세(systemic levy) 도입 약속 ● 책임감 있는 소매금융 촉진을 위한 새로운 규제 ● 개정 유럽규제감독 프레임워크 ● 건전성감독청 설립, 증권시장청의 권한 및 직무범위 확대
구조개혁정책
● 주요 연금개혁 : 법정 정년 인상,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연구개발, 혁신,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민간투자 제고 조치 : 미래투자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연구세액공제, 대학의 자유 및 의무에 관한 법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클러스터(산업집적화) 정책 ● 비활동성 함정(inactivity trap)에 빠질 가능성을 줄이고 고용보험청(unemployment agency)이 보다 효율적으로 실업자를 일자리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연안정성(flexicurity) 및 근로지불전략(make work pay;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보존해 줌으로써 유급노동 참여 독려)을 추구하는 노동시장정책 시행 ● 경제현대화법(Economic Modernization Law) 및 지방기업세제개혁으로 성장·경쟁·혁신을 위한 보다 매력적인 기업환경 제공 ● 유럽서비스규정(European Service Directive)의 시행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 ●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유럽 2020' 전략 지지
대외개발정책
● GNI대비 ODA 비중 확대(2010년); 2011-2013년중 원조기금의 수준을 유지하기로 약속

● 국가협력전략 : 4대 목표(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빈곤퇴치, 글로벌 공공재, 법치), 5대 중점 분야(의료, 교육, 식량안보,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 성장 지원), 4대 지리적 파트너십(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중해 지역, 신흥국,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은 국가)
통화·환율정책
(EU 참조)
이 태 리 (선진적자국)
재정정책
재정건전화 ● 순차입(net borrowing) 감소(누적기준) : 120억유로(2011년), 250억유로(2012/2013년) — 지출 감소로 인한 조정분이 75% 차지 ● 성장친화적 구조정책과 연금시스템 개혁이 재정건전화의 상당 부분 차지 ● 기초수지 2011년에 흑자(GDP의 1%) 전환후 흑자폭 확대; 순차입 2012년에 GDP의 3% 이하로 축소후 감소세 지속; 채무비율(GDP대비) 2012년부터 하락 예상
금융부문정책
금융부문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 건전성관리 차원에서 중앙은행(Bank of Italy)이 보상기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의회는 정부에 상장회사의 투명성 제고 역할 위임 ● 가계주택대출,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자본·자금조달, 연구·혁신에 대한 투자 및 효과적인 소비자금융감독 지원 ● EU 차원에서는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European Financial Stability Mechanism) 설립 및 감독규정 승인을 통해 금융안정성 유지
구조개혁정책
● 재정연방주의 제정 및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을 통해 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 장려;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중앙정부예산의 지방정부 교부액(transfer) 감축; 지방정부 차원의 조세포탈 방지 유인 설계 ● 연금시스템 개혁 : 기대수명 변화에 연동하여 정년을 정기적으로 자동 조정 ● 지출통제 강화를 위한 예산프레임워크 개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 행정비용 감소를 통해 보다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 ● 분권화되고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협상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 여성·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 에너지 부문 및 지역 공공서비스의 규제체계 개선 ● 중등·고등교육 개혁 ● 연구·혁신 개발
영 국 (선진적자국)
재정정책
● 채무 감축 : 2009-2010회계연도부터 2015-2016회계연도 사이에 구조적 공공차입(GDP대비) 8.4% 감축 ● 재정관리체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예산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신설

● 5개년 예측기간 말까지 구조적 균형재정수지 달성을 위해 새로운 미래지향적 재정책무(forward-looking fiscal mandate) 도입; 2015-2016회계연도까지 순공공채무(GDP대비) 감축
금융부문정책
금융부문의 시스템리스크 감소를 위한 조치: ● 국제적으로 합의된 자본·유동성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영란은행(중앙은행)에 거시·미시건전성 규제권한을 부여하여 금융규제감독체계 개혁 ● 은행의 위험완화적 자본조달을 장려하기 위해 은행세 도입(2011.1.1일) ● 은행 구조개혁 및 은행산업 경쟁상황 검토를 위해 독립적인 은행위원회(Banking Commission) 설립
구조개혁정책
● 고용주의 국민연금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분담 의무가 없는 임금 한도 인상 ● 중소기업의 신용접근성 제고수단 도입 ● 다양한 근로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후생효과 제고를 위해 단일 근로프로그램 창설 ● 학교·유아교육 재원 확충, 취약계층 대상 교육 지원, 고등교육체계 개혁 ● 교통·과학과 같이 경제적 편익이 큰 프로젝트에 대한 인프라 투자 ●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 설립 ● 공공지출 감소로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제 감면 및 지역발전기금 설립
대외개발정책
보호무역주의 배경, 가능한 신속하게 도하개발아젠다 완료; GNI대비 ODA 비중 목표치(0.7%) 달성
통화·환율정책
●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도록 통화정책 운용 ● 파운드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
미 국 (선진적자국)
재정정책
● 단기적으로 강한 경제회복 지원, 중기적으로 연방예산의 재정건전화 달성 ● 신 의료보험개혁 입법으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1000억달러 이상 감축 ● PAYGO 원칙 도입에 따라 조세감면 혹은 지출시 재원마련 의무화 ● 2011회계연도 예산에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1.2조달러 감축방안 포함 ● 재정적자(GDP대비) 감축 : 10%(2010회계연도) → 3.8%(2014회계연도) ● 대통령직속 재정개혁위원회는 2015년까지 균형기초수지 달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보고할 예정(2010.12월)
금융부문정책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의 주요 4대 개혁 목표: ● 규제체계의 허점 보완 및 시스템 리스크 감소를 위한 감독 강화 ● 증권시장을 포함한 주요 시장(critical markets)에 대한 규제 강화 ● 소비자금융보호청 설립을 통해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SIFI 整理체계 개선

구조개혁정책
다양한 구조개혁 조치를 통해 미국경제의 경쟁력 향상 ● 교통, 광역인터넷, (에너지 절약) 일렉트릭 그리드에 대한 인프라투자 확대 ● 교육, 직업훈련, 대학교육기회(college affordability) 확대 ● 과학 및 기초연구 펀딩 확대 ● 의료보험개혁 ●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대외개발정책
● 인류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을 위해 전세계적 균형성장(broad-based growth), 민주적 지배구조,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개발정책 추진 ● 다자개발은행(MDB)의 자본 증액을 위한 재원 확보; 국제개발협회(IDA) 및 아프리카개발기금(AfDF)의 재원확충과 관련하여 선도적 역할 수행 ● L'Aquila 식량안보 이니셔티브 및 세계농업및식량안보(GAFS) 프로그램에 각각 35억달러 및 475백만불 지원 약속 ● 세계보건 이니셔티브에 630억달러 지원 약속
통화·환율정책
● 시장에서 미달러화 환율 결정 ● 연준은 법에서 정한 두 가지 목표인 고용극대화 및 물가안정 추구; 경기판단·전망 및 장기목표와 관련하여 의사전달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조치 단행; 통화정책기조의 조정능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수단 개발
아르헨티나 (신공화국)
재정정책
● 대외채권자들과의 관계 정상화 및 국채의 장기 평균상환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상환능력 확보; 이에는 채무재조정 및 지방정부채무(provincial liabilities) 만기연장 담보를 위한 조치 포함 ● 재정수입 증가세 확대
금융부문정책
● 금융부문의 건전성 제고 및 위험관리에 대한 규제 갱신 ● 저소득 가구의 광범위한 은행시스템 접근성 제고
구조개혁정책
● 교육예산 비중 증가 ● 정규직 고용 비중 확대; 금융유인을 통해 중소기업 및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신재생에너지 원천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증대 및 유통망 개선 ● 교통비용 절감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및 인접국과의 무역 촉진 ● 혁신 촉진 및 기술인프라 개선 ● 저소득 가구 및 연금생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외개발정책
● 다자개발기구 참여 확대 ●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간 협력(South-South cooperation) 지원
기타정책
● Mercosur 지역에서 국경세(cross-border taxes)의 점진적 면제를 통해 동 지역의

수입비용 절감 ● 고부가가치 사업 및 식량안보 촉진을 위해 농업 부문에 대한 무역·사업·기술 지원 ●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용 지원
중 국 (신흥흑자국)
재정정책 ● 재정정책의 안정성 및 지속성 유지; 선제적 재정정책의 지속적 시행; 경제발전에 맞추어 정책 적합성 및 유연성 향상 ● 경제발전의 질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위해 내수(특히, 소비자 수요) 확대 ● 경제발전의 추진력 및 활력을 현저히 향상시키기 위해 재정 및 세제 시스템 개혁 ● 조화로운 경제·사회발전 촉진을 위해 국민생활 안정 및 향상
금융부문정책 ●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SIFI 규제, 금융안전망을 위한 정책수단 개선 ●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 및 유동성 요건 설정; 자본시장 개혁; 보험부문에 대한 위험조정 자본요건 도입; 국제회계기준 이행 강화
구조개혁정책 ● 도시·농촌 거주자에 대해 균등한 고용기회 보장;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이주노동자 참여 장려 및 취업기회 향상; 사회안전망 제고 및 농촌지역 인프라 개선 ● 민간투자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 도입 ● 교육 및 R&D 지원 확대 ● 서비스부문 발전 지원
대외개발정책 ● 오염 과다유발 제품 및 에너지·자원 과다소비 제품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감소, 상품수출 안정화, 서비스수출 확대, 가공무역의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촉진 ● 7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ASEAN, 파티스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중국(본토)은 홍콩·마카오 특별자치구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타이완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 UN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33개 최빈개도국에서 생산된 4700개 이상의 과세대상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 ● 개발도상국간 협력(South-South cooperation) 증진
통화·환율정책 ● 완화적 통화정책기조 유지 ● 위안화 환율시스템 개혁, 환율유연성 제고, 경상수지 균형 촉진
인도네시아 (신흥흑자국)
재정정책 ● 재정적자(GDP대비) 감축 : 2.1%(2010년) → 1.8%(2011년) ● 국가채무(GDP대비) 2011년말까지 26-28%로 감소
금융부문정책 ●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 참여 및 FSAP 결과를 토대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행동계획(action plan) 마련 ● 글로벌 자본·유동성 기준 강화를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종 제안(Basel

III)을 따라 규제체제를 조정하면서 Basel II 이행 완료 ● 개별 규제기관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해 추가적 요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건전성 요건에 대한 규제정책 보완 ● 빈번한 감사와 더불어 모든 규제대상 기관에 위험조정 감독기법 적용 ● 금융규제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시스템안전방법안의 입법화 추진 ●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구조개혁정책 ● 관개(irrigation), 교통, 주택, 수자원, 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가속화 ● 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부보증/정부유자 강화를 위해 규정(Presidential Regulation 13/2010) 마련 ● 2011년 인프라 개발 목표 : (i) 국가식량안보 강화, (ii) 승객 및 화물 운송을 위한 국내 연결체제 개선, (iii) 가상 국내 연결체제(통신) 강화, (iv) 주택공급 적체 해소, (v) 국가에너지안보 강화, (vi) 수자원 및 홍수 관리 강화 ● 'PT 인도네시아 인프라 금융(Infrastructure Finance)' 설립
대외개발정책 ● 정부의 “빈곤 퇴치, 일자리 창출, 성장 추구(pro poor, pro job, and pro growth)”를 위한 경제정책 지원을 위해 금융소외계층 포용(financial inclusion) 이니셔티브 심화·촉진 ● 빈곤감축 프로그램 확대·강화 ● 취약빈곤가구 적용범위 개선을 위해 가족기반 사회부조 시스템 확대; 모든 가정을 위한 의료보장 적용범위 개선; 모든 교육단계에서 빈곤층 학생 대상 장학금 확대 ● 지역인프라개발 및 빈곤퇴치 사업(PNPM Mandiri) 재원 확대 : 10.3조 루피아(2009년) → 12.1조 루피아(2010년) ● 중소기업 신용접근성 제고 프로그램(Kredit Usaha Rakyat)의 적용대상 확대 및 분배 메커니즘 개선 ● 법정준비금과의 연계 등을 통해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촉진 ● Sharia 은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광범위한 은행 서비스 제공
통화·환율정책 ● 통화정책 운용방향 : 금융시스템 안정에 유념하면서 물가안정 추구, 경제성장 촉진, 통화정책 체계에 거시건전성 정책 편입 ●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 지원 ● 중앙은행(Bank Indonesia)은 2010.6월 통화운용(monetary operations)을 뒷받침하고 은행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 정책수단 및 금융·외환시장 관련 정책 패키지 마련
브 라 질 (신흥적자국)
재정정책 ●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을 기반으로 재정규율 설계 ● 재정정책은 부채 프로파일(debt profile) 개선 및 순채무비율(GDP대비)의 점진적 감소를 목표로 공공자원의 균형잡힌 사용 추구 ● 예산지침법상의 재정건전화 목표 : 2011-2013년 통합기초수지 흑자 달성(GDP의 3.3%), 순채무(GDP대비) 감소세 유지(36.7%(2011) → 30.8%(2013)) ● 높은 수준의 성장세 회복에 따라 금융위기관련 소비진작 조치 철회 ● 사회안전망 유지·확장

● 공공투자 확대
금융부문정책
● BCBS가 권고한 바와 같이, 신용·시장·운영 위험에 대한 국제기준에 따른 자본배분을 모든 금융기관에 요구; 시장위험에 대한 선진 자본요건 도입 ● 자본요건에 대한 선진기법 도입이 진행중이며 2013년까지 완료 예정 ● 개정 Basel III 기준 및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보상원칙을 신속히 채택할 예정 ● 은행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제고
구조개혁정책
● 경제발전 전략은 경제성장과 사회적 불평등 감소를 조화롭게 추구 ● 사회적 포용, 연구·기술 혁신, 교육, 주택 및 인프라 관련 조치 – 사회복지 프로그램(예: <i>Bolsa Família, LeiOrgânica da Assistência Social e Renda Mensal Vitalícia</i>) 유지·확대 – 연구·기술혁신 제고 – 교육프로그램 강화 – 투자여건 개선 ●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투자 : 성장가속화프로그램(PAC2)을 6대 주요 투자부문(주택, 도시정비, 시민공동체, 물·전기, 교통, 에너지)으로 구분하고 2011-2014년중 동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 5457.1억달러를 마련한 후 2014년 이후 추가적으로 3608억달러를 증액 ● 대규모 스포츠 행사(2013 FIFA 대륙간컵대회, 2014 FIFA 월드컵, 2016 올림픽) 준비를 위해 365억달러 투자
대외개발정책
● 개발도상국간 협력을 통한 개도국 기술 지원,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연, 인도주의적 원조
통화·환율정책
●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 인플레이션 타게팅 및 변동환율제 ● 중앙은행은 화폐 구매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견고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더욱 강하고 안전한 국내금융시스템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달성에 기여 ● 과도한 자본유입 예방을 위해 필요시 거시건전성 수단 및 통제를 사용할 수 있음
인 도 (신흥적자국)
재정정책
● 중기 재정목표 : 경제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구조적 재정개혁과 건전한 재정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조속히 재정건전화 달성 ●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국가채무(GDP대비) 감소를 목표(target)로 설정
금융부문정책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을 지원하면서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운용 ● 규제기관간 공조 향상 및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예정) ● 금융관련법령 재정비를 위해 금융입법위원회 설립을 공표 ● 'IMF/World Bank 공동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요청

●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보상원칙을 바탕으로 민간부문 및 외국은행에 적용될 가이드라인 마련 ● 바젤자본적정성규범 채택, 국제회계기준으로 수렴, 국가간 감독프레임워크 채택을 위한 로드맵 개발, 환과생상품 장외거래 지침 완료, 회사채 CDS 도입에 관한 지침 개발 등과 같이 G20 금융개혁 의제와 연관된 많은 부문에서 진전 ● 보다 적절한 가격 설정 및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이자율 규제 대부분 철폐
구조개혁정책
● 민자유치를 통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공공민간파트너십 등을 통해 동 부문에서 민간부문의 역할 제고 ● 세제개혁 : 상품서비스세(GST; 부가가치세와 유사) 도입, 원활한 조세순응절차, 직접세법(Direct Taxes Code)으로 조세징수의 효율성 제고, 순응비용 경감 및 조세입법 간소화 ● 국제시세 변동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면서 시장에서 도·소매 휘발유·경유 가격 결정 ●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모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정책 추진 ●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2010.4월부터 비료 부문에서 영양기준보조금(Nutrient Based Subsidy) 정책으로 이행
대외개발정책
● 사회 부문 및 인프라 개발을 강조하면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개발정책 추진; Bharat Nirman 제도(상수도, 주택, 통신, 원격통신 및 IT, 도로, 전기, 관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시행 ● 2022년까지 숙련 노동자 5억명 양성을 목표로 기능개발 향상 조치 추진; 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투자 ● 의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 : 의료시설에 공공·민간 공동참여, 국가의료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및 지역보건증진기관(National Rural Health Mission) 산하 보건교육기관 설립 ● 농촌지역 주민의 생계안전 대책 추진 (예: '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 시행) ● 비조직화된 부문의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2008)을 제정하고 동 노동자들을 위해 국가보장기금(National Security Fund) 설립
기타정책
● 지역간특혜자유무역협정(예: ASEAN 및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일본·EU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통해 세계와 교류 증대 ● 대다수 부문에서 신고주의(automatic route)하에 100%까지 해외직접투자(FDI) 허용 ●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특혜제도; 지금까지 25개 국가가 동 제도의 적용을 신청 ● 도하개발아젠다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개도국에 특별 대우
맥 시 코 (신흥적자국)
재정정책
● 경기순환적 요인으로 석유와 무관한 조세수입이 일시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소폭의 일시적 재정적자를 유지하는 한편, 석유관련 수입의 영구적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석유와 무관한 조세수입의 영구적 증가를 목적으로 세제 개혁 ● 동 전략으로 2012년 균형재정수지 달성 전망 : 2010년 GDP대비 0.7% 적자 →

2011년 0.5% 적자 → 2012년 균형재정 달성
금융부문정책
● 금융시스템 안정성 감독을 위한 조정 메커니즘으로 금융시스템안정위원회(Financial System Stability Board) 설립(2010.7월) ● 새로운 바젤기준에 따른 자본적정성 요건을 이미 대부분 충족 ● 규제개혁 및 은행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 촉진 ● 체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위해 규제범위 확대 추진 ● 은행 파산체제 강화 ●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상호점검(peer review) 완료
구조개혁정책
●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각종 이니셔티브 : 무역개방 확대, 노동·상품시장 개혁, 규제 축소, 인프라 공공투자 확대
대외개발정책
● 빈곤퇴치 프로그램 강화 ○ 건강 및 교육 향상을 목적으로 조건부현금보조에 사용될 자원 확대 ● 보험 비가입자(covered population)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자원 확대
통화·환율정책
● 중앙은행(Banco de México)은 2001년부터 인플레이션 타케팅(현재,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 3%)하에 통화정책 운용 ● 환율은 시장에서 자유로이 결정(변동환율제)
남아프리카공화국 (신흥적자국)
재정정책
● 경제회복에 따라 재정적자(GDP대비) 감소 전망 : 6.7%(2009-10년) → 3.2%(2013-14년) ● 순국가채무는 2015-16년에 최고조(GDP의 약 40%)에 달한 후 감소 전망 ● 향후 3년간 연간 실질지출(이자 제외) 증가율 2.7% ● 조세수입 회복세가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향후 세금 인상을 고려할 수 있음(현 시점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금융부문정책
● 주요 목표 : 금융안정성 강화, 빈곤층 대상 금융서비스 확대, 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헤지펀드 및 사모주식투자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 위기대응체계 검토
구조개혁정책
● 전기, 교통, 전자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2013-14년까지 3년간 총 8112억 랜드 규모의 공공부문 인프라투자 예산 책정 ● 생산원가 반영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發電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 개혁 ●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은 노동자 및 제조업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 청년 취업 향상 프로그램(취업서비스 확대, 지역근로프로그램), 청년 일자리 기금, 임금 보조(고려중) ● 경제에 필요한 기술수준 제고를 위해 국가기술발전전략(National Skills Development

Strategy) 수립 ● 국가저축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진행중) ● 새로운 국가의료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시스템 고려중 ● 사회적·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조세 수단 도입 ● 무역정책 검토(2010년 완료) 결과 관세(tariff)에 대해 사안별로 접근하는 방안 지지 ● 고용유발 효과가 큰 방향으로 산업화 추구
대외개발정책 ● 국제개발협회(IDA), 아프리카개발기금 등과 같은 다자간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여 혹은 역량 구축,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을 둔 양자·삼자 협력을 통해 개발자금 조달에 기여
통화· 환율정책 ●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 인플레이션 타게팅(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 3-6%) ● 변동환율제도이나 대외 취약성을 줄이고 환율의 과도한 고평가를 제한하기 위해 외환매입 가능; 환율 변동성을 야기하는 대규모 FDI 관련 자본유입 흡수를 위한 외환스왑도 이용 ● 장기적으로 외화자산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기업에 대한 외환통제 완화(2010.10월) ● 공무원연금의 해외투자 허용을 포함하여 연금펀드의 건전한 외화자산 투자 한도에 대해 검토중
터 키 (신흥적자국)
재정정책 2011-2013년 중기 프로그램 발표(2010.10.10일) ● 재정적자비율(GDP 대비) 감소 : 3.7%(2010년) → 1.1%(2013년 말) ●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감소 : 42.3%(2010년 말) → 36.8%(2013년 말) ● 지출 프로그램 검토; 지출 우선순위 선정 ● 공공부문 투자는 경제·사회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 정액세(lump-sum taxes) 및 수수료 점검 ● 감사 강화 및 조세행정의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 계획' 갱신 ● 지방정부의 수입 증대 및 재정관리 향상 ● 국제기준과 완벽히 양립될 수 있도록 재정통계 작성
금융부문정책 ● 국제기준 및 유럽연합 규범(EU acquis)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금융규제감독 강화 ● '이스탄불 국제금융센터 전략 및 행동계획'의 단호한 이행 ●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갱신(2011년 예정)
구조개혁정책 ● 지역전략 이행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입은행(Eximbank) 자원 확대를 통해 수출 신용 및 지급보증 지원 시설 개선 ● 정책 및 인센티브를 통해 중간재·투자재 생산설비 개선 ● 프로그램 및 유인체계를 통한 노동의 질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중소기업의 경쟁력, 효과성, 고용창출여력 제고 ● 교육, 의료, 기술연구, 교통, 식수, 통신, 정보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 ● 사회보장시스템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동 시스템의 IT 인프라 강화

지역정책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최근의 두 가지 이니셔티브 : 지역개발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Regional Development), 지역개발위원회(Regional Development Committee)
대외개발정책
- 향후 ODA 규모(2009년 기준 약 7100억달러) 확대 예정 - 제4차 UN 최빈개도국 컨퍼런스(UN Conference on LDCs) 개최(2011년)
통화·환율정책
- 통화정책체계 : 인플레이션 타게팅(2006년 도입), 시장변동환율제도(2001년 도입) - 비정상적 조치로부터의 출구전략 발표(2010.4월) - 정책금리는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11.4분기부터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가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시 예상된 통화긴축은 연기될 수 있음
러 시 아 (석유수출국)
재정정책
2011-2013년 예산정책방향 : 석유·가스 자원에 대한 의존을 점차 줄여 나가고 연방재정적자를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거시경제균형 회복 ‘예산지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2012년까지의 러시아연방정부 프로그램’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핵심 조치 - 토론토 G20 정상회의 합의에 기반하여,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2009년 수준에 비해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 마련
금융부문정책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서 국제기준, G20 및 금융안정위원회(FSB) 이니셔티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금융규제감독을 개선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 - 금융시장의 역량(capacity) 및 투명성 제고 - 시장 인프라의 효율성 보장 - 금융시장 참가자를 위한 우호적인 조세 환경 조성 - 금융시장의 법적 규제 개선 - 국제회계기준 채택, 주(state) 및 민간 부문의 보상체계 강화 - 신용평기기관 인증 절차 - 러시아 국제금융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거래소 거래 및 청산 절차에 대해 적절한 규제 지속
구조개혁정책
- 혁신형 경제 개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의 하나로 Skolkovo市에 신기술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과학기술 단지 조성 - 혁신적 납세자를 위한 유인체계 신설 및 혁신·현대화 지원을 목표로 조세정책 추진 - 노동시장 비효율 감소 - 연금 및 사회개혁 추진
대외개발정책
주요 국제기구 및 G8 프로세스와 더불어 인도주의적 지원, 무상원조, 특혜무역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적 프로그램에 대해 자금 지원
통화·환율정책

-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 : 인플레이션 감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수준 유지
- 세계 주요 통화 대비 루블화의 급격한 변동성 완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중앙은행(Bank of Russia)은 직접적인 환율 개입을 자제하고 루블화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율정책 운용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수출국)

재정정책

- 지속적인 고성장 달성을 위해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 운용
- 이를 위해 기초·사회 인프라 지출 확대 요구

금융부문정책

-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갱신(2011년 예정)
-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원칙과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보상규범 마련
- 은행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지속 : 은행의 Basel-II 도입 장려, 스트레스 테스트 절차 강화, 위험조정 현장검사 실시, 건전성규제 갱신 등
-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해 시장인프라 강화

구조개혁정책

-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무역정책·노동시장·상품시장 개혁(제9차 2010-2014년도 개발계획)

대외개발정책

- 주로 무상원조(grant)나 저리연화차관(soft loan)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개발원조 규모는 GDP의 약 4%에 달함
- 개발원조는 사회·경제인프라 재원조달, 특혜제공(concessional), 채무탕감을 중심으로 지속

통화· 환율정책

- 통화정책은 물가·환율·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목표로 하며, 대부분의 대외거래가 미달러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알화를 미달러화에 페그시키는 고정환율제도 유지
- 국내 경제상황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고려하여, 통화당국(Saudi Arabian Monetary Agency)은 완화적 통화정책기조 추구

유럽연합(EU)

재정정책

- 점진적이며 성장 친화적이고 회원국별로 차별화된 재정건전화 추구
- 재정 및 거시금융 리스크를 고려하여 유로지역과 EU 회원국들간에 각기 다른 속도로 재정건전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가속화하며 늦어도 2011년에는 재정건전화 착수
 - 지출 건전화, 특히 공공소비 및 이전지출(교육·연구·개발분야 제외) 건전화는 동조치가 영구적 효과를 가지고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우선 추진하며, 국별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건전화도 고려
 - 유럽공동체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국별 채무상황을 주시하고 유인체계를 강화하면서, 안정및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하에서 재정감시(fiscal surveillance)를 강화하자고 제안

금융부문정책

● 유로지역 국채시장의 긴장 해소를 위해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European Financial Stabilization Mechanism) 및 유럽금융안정기구(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설립 ● 투명성을 제고 및 금융회복(financial repair) 가속화를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 금융감독패키지 : 금융시장 모니터링, 안정성 확보, 다국적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개선을 위해 유럽시스템규제기관(European systemic regulator) 및 세 개의 유럽감독당국(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설립 ● 금융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시건전성 이슈를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개혁 프로그램 마련
구조개혁정책
● 성장 제고를 위한 개혁 : 취업률, 노동시장 참여율, R&D 지출, 에너지 및 기후변화, 교육, 소외계층 포용(social inclusion)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된 '유럽 2020' 전략 추진 ● 단기적으로 연금개혁, 경쟁력 및 노동 활용도·생산성 제고(예: 단일시장(Single Market) 강화,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노동시장 분할 축소, 근로유인 개선) 등과 같이 성장을 촉진하고 재정건전화를 지원하며 시장의 자신감을 제고하는 개혁 가속화 ● 국별 경제정책의 사전 공조, 거시경제·경쟁력 불균형의 예방 및 교정, 적절한 유인체계를 통해 감시(surveillance) 및 EU의 경제관리체계 강화
대외개발정책
● ODA 규모를 2015년까지 GNI대비 0.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 재확인 (ODA 규모는 2000년 이래 이미 두 배 증가하였으며 무역관련 원조는 매년 20억유로 규모로 확대)
통화·환율정책
● 유로지역의 통화정책은 중기적으로 유로지역 전체의 물가안정 달성에 중점 ● 현재의 확장적 통화정책기조는 유로지역의 위험요인 및 물가안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속도로 정상화 ● 유로화 환율은 변동환율제에 의해 결정
스 페 인 (초청국)
재정정책
● 안정프로그램(Stability Program)에 명시된 건전화 이행 경로(consolidation path)에 더하여 내각은 재정건전화를 가속화하여 2013년까지 GDP대비 3%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감축(9.3%(2010년)→6%(2011년)→4.4%(2012년))하기 위해 2010/2011년 공공지출 조정방안을 승인(2010.5.20일); 구조적 재정조정의 25%는 수입 증가를 통해, 75%는 지출 감소를 통해 달성 ● 정부의 재정관리체계 강화 : 州(Region)의 채권 신규 발행에 대해 중앙정부는 구체적인 리밸런싱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위원회(Council) 의견 및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반기 검토를 기준으로 승인여부 결정; 지방정부도 재정적자 감축 목표 승인 ● 비금융성 지출 7.9% 감축안을 포함하고 있는 2011년 중앙정부 예산(안)이 현재 의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동 예산에는 영세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주택소유자에 우호적인 재정편의(fiscal bias)를 제거하기 위한 재정적 조치도 포함
금융부문정책
● 2010.7월에 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저축은행 규제안은 은행의 자본 접근성에 대한 유연성 제고, 지배구조의 전문화, 주주의 대표성 개선(특히, 선출직과 고위 임원의

이사회(governing body) 참여 금지)과 같은 개혁 조치 포함 ● 자본요건규정(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에 관한 2차 개혁안(CRD II)의 이행으로 증권화(securitization) 및 큰 폭의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요건 개선, 하이브리드 증권(hybrid capital instruments)의 질 향상, 감독기관의 유럽 관점(European dimension) 강화 ● 양도성증권에 대한 집단적 투자(UCITS)에 관한 규율을 도입함으로써 UCITS 시장의 효율성 극대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행정부담 경감
구조개혁정책 ● 서비스부문 진입장벽 및 행정부담의 획기적 감소 ●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의 자원 재배분 촉진, 세제 혜택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및 R&D 투자 유도를 위해 지속가능경제법(Sustainable Economy Law) 추진중 ● 전문서비스법(Professional Services Law)의 시행을 통해 전문 서비스의 제공을 가로막는 제한요소 감소 ● 노동시장 개혁안(2010.9월 의회 통과)의 4대 주요 목표 : 기업 차원의 내부 유연성 확대, 노동시장 분할 축소, 노동 시장에서의 매칭(matching) 개선, 인적 자원 강화 ● 의회에 이송될 예정인 공적연금시스템 개혁안의 초안에 법정 정년 인상안 포함
대외개발정책 ● 2009-2012년 마스터 플랜에 의해 대외개발정책 지침 마련; 2010년 현재 0.5%인 GNI대비 ODA 비율을 늘려 2015년에 목표치(0.7%) 달성; 개발정책은 빈곤퇴치를 위한 경제성장 지원, 환경 지속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기후변화 대응에 우선순위 부여